필리핀과 한국의 반미운동: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박사 명 *

I. 서론


최근 반미의식의 고조는 지난 세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특정 세대, 특정 계급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국민정서화 되고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smpark@kangwon.ac.kr
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해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국 자체에 대한 보편적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 특히 최근의 반미투쟁은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효과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전국연합 2003).

한국사회에 있어서 반미운동의 그와 같은 ‘질적’ 전환이 극단적 ‘킬미’에서 극단적 ‘반미’까지 광범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경험하는 필리핀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하다. 2차대전 이후 급속하게 고착되는 양극적 냉전 체제는 미국패권에 지향하는 반미운동과 소련패권에 지향하는 반공운동의 세계적 확산을 초래한다. 한반도의 경우 분단체제의 고착에 따라 국가가 동원하는 반미운동(북한) 및 반공운동(남한)을 제외한 사회의 자율적 반미운동(남한) 및 반공운동(북한)은 전면적으로 통제된다. 그러 나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필리핀과 유사하게 강력한 반미운동의 부상에 직면한다. 사실 한반도와 필리핀은 일본과 미국이 상호공존에 타협하는 ‘카쓰라-테프트(Katsura-Taft) 밀약’(1905년)을 통하여 처음으로 그 역사적 운명이 연계된다. 그러한 상호관계는 미국과 일본의 상호충돌을 초래하는 2차대전 이후 일본에 대한 ‘결령군’이자 필리핀과 한반도에 대한 ‘해방군’으로서 미국의 패권적 위상이 동남아와 동북아 전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더욱 긴밀하게 강화된다.

미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 수용을 초래한다. 그러나 1980년 광주항쟁과 1987년 6월항쟁에 따라 분단체제의 고착과 군부독재의 강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비판하는 반미운동이 확산된다. 그 결과 필리핀과 한국의 반미운동에 있어서 미군주둔의 성격은 '해방'에서 '점령'으로 반전되고, 대미관계의 본질은 '동맹'에서 '종속'으로 격하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본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 필리핀의 미군 기지 철수는 필리핀과 한국의 다양한 차별성이 부각되는 새삼스런 계기이다.

필리핀과 한국의 반미담론에 있어서 반미운동의 심리적 성향에 관한 시각은 다양하다. 대체로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정서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부분적이며 가변적인 거부는 '반미감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객관적 상황의 변화와 무관한 의식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거부는 '반미주의'로 인식된다. 그러한 반미운동의 실천적 동향에 있어서도 '반미감정'과 '반미주의'의 상대적 비중에 관한 시각은 다양하다. '반미주의'의 압도적 비중을 강조하는 시각은 급진적 현상태파를 우려하고, '반미감정'의 압도적 비중을 강조하는 시각은 극적 현상유지를 기대한다. 그러나 반미운동의 현실적 효과에 있어서 '반미감정'과 '반미주의'의 두드러진 차별성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연구는 대미동맹과 반미운동의 상충적 전개과정에서 필리핀과 한국이 드러내는 유사성 차별성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사회 반미운동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필리핀과 한국에서의 반미운동의 전개과정 및표출양태를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할 것이다.
II. 역사적 전개

1. 필리핀의 반미운동

1945년 일본의 패전에 따라 미국은 '해방군'으로서 식민지 필리핀의 권력공백에 복귀한다. 그러나 식민시대를 통하여 성장한 급진적 민족주의의 반미운동은 1946년 공식적 독립 이후 한국전쟁과 유사한 시기에 후고(Huks: 항일인민군) 농민전쟁을 통하여 표출되며, 냉전체제의 고착과 미국의 군사원조에 따라 잠복한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사회개혁의 부진과 경제발전의 정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대외적으로 '반(¥)식민주의적' 대미종속구조와 대내적으로 '반(¥)봉건주의적' 과두지배체제의 유기적 공생관계로 파악하고, 식민체제에 대응하는 혁명적 민족주의와 과두체제에 대응하는 민중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이 부상하여 '가두의회'로 진출한다(Sison 1967). 그와 같은 경제반동에 있어서 중국사회의 급진화, 베트남전쟁의 국제화, 인도네시아정치의 좌향화 등 급진적 혁명운동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동아시아 정치지형의 영향도 결코 파소평가될 수 없는 국제적 조건이다.

1970년대 한국의 '유신' 독재체제에 상응하는 마르코스(Ferdinand Marcos)의 '신사회(New Society)' 독재체제는 군부독재와 문민독재라는 표면적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유사성을 드러낸다. 대외적으로 중소분쟁, 미중합, 베트남전쟁, 미군철수 등 냉전체제의 균열과 대내적으로 과두체제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혁명'에 대처하여 민족자주, 사회개혁, 경제발전 등을 위한 '위로부터의 혁명'을 추구하는 '신사회'체제는 사회의 급진적 반미운동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과학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대응하여 민족적 주체성을 표방한다. 국가의 '공식적 민족주의'가 사회의 급진적 민족주의
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보수적 '주체담론'은 1980년대에 부활하
는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의 급진적 '반미담론'에 일정한 기반을 제공한
다.

마르코스 독재체제의 경제적 과반과 정치적 과극에 대응하여 강화되
는 공산당(CPP: Communist Party of the Philippines)-신인민군(NPA: New
People's Army)의 혁명투쟁은 1980년대에 이르러 마르코스 독재체제와
지주제급 과두체제에 대한 미국의 후견을 비판하는 반미운동의 광범한
부활을 촉진한다. 1983년 아까노(Benigno Aquino)의 암살을 계기로 혁명
적 위기가 고조되고, 1986년 민주혁명을 계기로 급진적 반미운동은 절
정에 도달한다(Bresnan 1986). 민주혁명 이후 반미운동의 표적은 제국주
의의 보로로 인식되는 미군기지에 집중된다(Abinales 1992). 냉전적식에
따라 약화되는 국가안보의 명분 내신 경제효과를 명분으로 기지철수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정부의 친미주의에도 불구하고, 1991년 사회의 급
진적 반미담론과 국가의 보수적 '주체담론'이 미군기지 철수로 수렴된
다. 그러나 다수의 사회여론은 여전히 기지철수에 반대하고(Ferret
1992), 1951년 상호방위조약은 여전히 유지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1997
년 '중국위협'의 부상 등 새로운 안보위협을 명분으로 미군의 '상시주둔'
대신 '일시방문'을 허용하는 '방문군대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
이 체결된다.

1950년대 농민전쟁의 종식에 따라 사회의 급진적 반미운동은 잠적하
는 반면 점진적 반미운동은 의회의 렉토(Claro Recto)와 타나다(Lorenzo
Tanada) 등을 통하여 그 명맥이 유지된다(Constantino 1965; Constantino
1983).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급진적 반미운동은 '미완의 민족혁명' 완
수를 지향하는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의 급진적 민족주의를 통하여 부활
한국의 반미운동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에 따라 한반도의 권력공백에 진입하는 미국과 소련은 ‘해방군’으로서 남과 북을 분할한다. 이른바 해방공간을 장악한 양대 패권의 통제 아래 급속하게 심화되는 좌우의 이념적 갈등은 남북의 정치적 분단으로 귀결된다. 양극적 냉전체제의 국제적 원실력이 강화됨에 따라 민족적 구실력은 급속하게 약화되며, 일시적 분단 상태는 민족상잔의 열전을 거치면서 장기적 분단체제로 고착된다. 한반도의 그와 같은 구조적 균열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 위상이 남북을 막론하고 각각 그 지지세력의 시각에서는 ‘해방군’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반면, 그 반대세력의 시각에서는 ‘전령군’으로서 전면적으로 거부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북한체제의 생존조건인 반미주의와 남한체제의 생존조건인 반공주의는 분단국가의 이념적
기반은 자물질적 기초로서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한다. 그에 따라 한반도 북부의 반공주의에 대한 통제와 남부의 반미주의에 대한 통제가 상승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분단체제의 정치역학이다.

북한의 전체주의에서 사회의 반공주의적 도전이 전면적으로 통제되는 반면 남한의 권위주의에서는 사회의 반미주의적 도전에 대한 통제가 부분적으로 이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 남한의 공고한 반공주의 정치지향에서 반미주의는 전반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이었다. 다만 베트남전쟁, 중소분쟁, 미중화해, 미군철수 등 '금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한 국력강화와 자주국방을 포장하는 '유신' 독재체제의 정당화를 위하여 '민족적 주체성'이 제기된다. 그 결과 국가주도적 민족주의의 보수적 '주체담론'이 일방적으로 확산되는 반면, 사회주도적 민족주의의 전보적 '반미담론'은 전면적으로 통제된다. 그러나 반드시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밑으로부터 사회의 전쟁, 민권, 역량에 대한 절망과 평화, 발전, 자유에 대한 열망은 미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1981년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미관계에 대한 전체 국민의 73%가 아직 '민족' 58.1% 및 '그저 그렇다' 32.6%에 이르는 반면 '불만족'은 9.3%에 불과하지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불만족'이 30.8%에 이른다(김진웅 2002: 19).

한국사회 반미주의의 등장과 성장에 있어서 1980년대는 역사적 전환단계로 평가된다. 한반도에 미군이 진주한 이후 거의 40년 만에 미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반미운동이 세계적 냉전체제와 민족적 분단체제가 초래한 한국사회의 강고한 역사적 지층으로부터 정치적 지표로 분출하게 되는 계기는 1980년 광주항쟁과 1987년 6월항쟁이다. 광주항쟁은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등장을

<table>
<thead>
<tr>
<th>설문 내용</th>
<th>20대</th>
<th>30대</th>
<th>40대</th>
<th>50대 이상</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조속 철판</td>
<td>17.1</td>
<td>9.9</td>
<td>4.6</td>
<td>2.5</td>
<td>9.8</td>
</tr>
<tr>
<td>점진 철판</td>
<td>68.0</td>
<td>68.2</td>
<td>55.9</td>
<td>47.5</td>
<td>61.9</td>
</tr>
<tr>
<td>철판 불가</td>
<td>14.9</td>
<td>21.9</td>
<td>39.5</td>
<td>50.0</td>
<td>28.2</td>
</tr>
</tbody>
</table>


어서 한국의 반미운동은 경제적 산업화, 사회적 다원화, 정치적 민주화 가 추동하는 대외적 주체화의 한 측면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성장, 사회 적 변동, 정치적 발전의 필연적 귀결로서 반미주의는 분단체제의 현상 타파를 위한 창조적 동력으로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Ⅲ. 현실적 양태

1. 유사성과 차별성

필리핀과 한국에서 1970년대에 잠복하고, 1980년대에 부상하며, 1990 년대에 확산되는 반미운동은 일정한 구조적 필연성과 상황적 우연성이 상호 긴밀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대외적으로 양극적 냉전체제의 이완 과 해체로 인하여 미국의 온정주의적 동맹정책이 약화되고 폐권주의적
국가이익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패권에 의존하는 반공주의적 ‘안보국가’가 약화된다. 대내적으로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의 약화에 따라 강화되는 민주주의적 사회제력은 반미운동의 동장과 성장을 주도하며, 그러한 정치과정에서 특정의 정권, 정책, 사건 등 지극히 유동적인 상황의 변화가 반미운동의 객관적 계기를 제공한다. 만성적 경제정체에 따라 심화되는 필리핀사회의 좌절의식은 가속적 경제발전에 따라 상승하는 한국사회의 자존의식과 유사하게 반미운동의 주체적 조건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구조적 요인은 한국과 필리핀의 유사성을 초래하는 반면 상황적 요인은 한국과 필리핀의 차별성을 대표한다. 그러나 구조적 차원에 있어서도 필리핀은 2차대전 이전의 식민체제로 인하여 대미의존이 심화되고, 한국은 2차대전 이후의 분단체제로 인하여 대미의존이 심화되는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그와 같은 유사성과 차별성은 반미주의의 확산범위와 심화수준에 있어서 필리핀과 한국의 다양성을 초래한다. 최근 이라크전쟁과 관련된 필리핀과 한국의 여론동향은 직접적 지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 지표로서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전 이후 2003년 45개 국가에 대한 이라크전쟁 관련 국제여론조사에서 필리핀과 한국은 상당히 대조적인 경향을 드러내는데, 전쟁의 정당성, 미국의 활동성, 테러의 위협성, 유엔(UN)의 실효성, 미국의 이미지, 미국의 공익성 등에 관한 필리핀의 여론은 양도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한국의 여론은 양도적으로 부정적이다(표 2). 2002년 36개 국가에 대한 국제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일반적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는 응답의 비율은 1위 아르헨티나의 65%, 36위 포르투갈의 14%에 비하여 5위 한국은 55%로서 저극히 비판적이다(Gallup 2002). 따라서 한국 반미운동의 사회적 지지기반은 필리핀보다 훨씬 광범한 것이다.
표 2 [이러크전쟁에 관한 국제여론 (단위 %)]

<table>
<thead>
<tr>
<th>설문내용</th>
<th>응답</th>
<th>필리핀</th>
<th>한국</th>
</tr>
</thead>
<tbody>
<tr>
<td>미국의 최근 군사행동이 정당하다</td>
<td>긍정</td>
<td>59</td>
<td>20</td>
</tr>
<tr>
<td></td>
<td>부정</td>
<td>37</td>
<td>69</td>
</tr>
<tr>
<td></td>
<td>무답</td>
<td>4</td>
<td>11</td>
</tr>
<tr>
<td>미국은 너무 군사행동을 선호한다</td>
<td>긍정</td>
<td>45</td>
<td>65</td>
</tr>
<tr>
<td></td>
<td>부정</td>
<td>52</td>
<td>27</td>
</tr>
<tr>
<td></td>
<td>무답</td>
<td>3</td>
<td>8</td>
</tr>
<tr>
<td>데리의 위협이 현실하게 감소된다</td>
<td>긍정</td>
<td>56</td>
<td>29</td>
</tr>
<tr>
<td></td>
<td>부정</td>
<td>42</td>
<td>60</td>
</tr>
<tr>
<td></td>
<td>무답</td>
<td>2</td>
<td>11</td>
</tr>
<tr>
<td>유엔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된다</td>
<td>긍정</td>
<td>45</td>
<td>79</td>
</tr>
<tr>
<td></td>
<td>부정</td>
<td>52</td>
<td>14</td>
</tr>
<tr>
<td></td>
<td>무답</td>
<td>3</td>
<td>7</td>
</tr>
<tr>
<td>자신의 그대인식이 최근 호전된다</td>
<td>긍정</td>
<td>55</td>
<td>13</td>
</tr>
<tr>
<td></td>
<td>부정</td>
<td>28</td>
<td>66</td>
</tr>
<tr>
<td></td>
<td>무답</td>
<td>17</td>
<td>21</td>
</tr>
<tr>
<td>자국에 대한 미국영향은 유익하다</td>
<td>긍정</td>
<td>61</td>
<td>24</td>
</tr>
<tr>
<td></td>
<td>부정</td>
<td>24</td>
<td>55</td>
</tr>
<tr>
<td></td>
<td>무답</td>
<td>15</td>
<td>21</td>
</tr>
</tbody>
</table>


2. 계속성과 가변성

필리핀과 한국의 다양한 여론동향은 심층적 분석을 요구하는데, 그 것이 정서적 '반미감정'이든 의식적 '반미주의'이든 일정한 조건에서 모두 반미운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반미감정'은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기반하는 다분히 상황적이고 유동적인 현상으로서 반미운동의 피동적 부분이며, '반미주의'는 거시적 구조에 대한 체계적 인식에 기초하는 상당히 구조적이며 향후적인 현상으로서 반미운동의 주동적 부분이다.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Vladimir Lenin)과 카우츠키(Karl Kautsky)의 고전적 논쟁과 같이 '정책(policy)'으로서의 제국주의는 상황적이고 선택적이지만, '체제(system)'로서의 제국주의는 구조적이며 필

필리핀과 한국에 있어서 반미운동의 그러한 표면적 양태에서 드러나는 차별성이 심리적 차원에서 행동적 차원으로 표출될 가능성, 즉 반미주의의 점진적이거나 급진적인 지향과 잠재적이거나 실험적인 수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계속성과 가변성에 대한 논리적 추론은 가능할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반미운동의 심리적 기초에 대한 심층적 해부가 긴요한바, 상황의 변화에 둔감한 지속적이며 의식적인 ‘반미주의’와 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가변적이며 정서적인 ‘반미감정’의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반미운동의 현실적 효과에 있어서 전면적이고 향구적인 의식적 ‘반미주의’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정서적 ‘반미감정’의 차별화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전자보다 후자의 파급효과가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 한편 반미주의를 광신적이고 전투적인 ‘경성 반미주의’와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연성(lite) 반미주의’—‘비미( 비미)주의’—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그 정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명한 차별화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Naim 2003).

최근의 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의 보수화 경향을 강조하면서 외교안보정책 부문의 보수화 경향을 부각하는 바, 한미동맹 중심적 정책의 다변화에 대한 지지는 2002년 41.6%에서 2003년 42.5%로 약간 증가하는 반면 미국주도 세계질서의 협력에 대한 지지는 6.6%에서 13.7%로 대폭

〈표 3〉 친북적 시각과 친미적 시각 (단위: %)

<table>
<thead>
<tr>
<th>시기</th>
<th>세대</th>
<th>북한호감도</th>
<th>미국호감도</th>
</tr>
</thead>
<tbody>
<tr>
<td>1996년</td>
<td>2030세대</td>
<td>19.2</td>
<td>36.7</td>
</tr>
<tr>
<td>5060세대</td>
<td>21.9</td>
<td>34.4</td>
<td></td>
</tr>
<tr>
<td>2003년</td>
<td>2030세대</td>
<td>15.3</td>
<td>39.6</td>
</tr>
<tr>
<td>5060세대</td>
<td>24.8</td>
<td>24.5</td>
<td></td>
</tr>
<tr>
<td>2030세대</td>
<td>43.4</td>
<td>14.1</td>
<td></td>
</tr>
<tr>
<td>5060세대</td>
<td>16.1</td>
<td>40.9</td>
<td></td>
</tr>
</tbody>
</table>

출처: 송호근 2003: 211.

그러한 심리적 성향은 '반미감정'과 '반미주의'가 착종하는 복합적 현상이며, '반미주의'는 '반미감정'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필연적 측면으로서 정서적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파편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며,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따라서 2001년 9·11사태 이전 강화되는 부시(George Bush)정부의 일방주의적 행태 때문에 북한핵위기와 이란 크폭발을 둘러싼 '반미감정'이 '반미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사회의 그와 같은 급진적 '반미주의'를 대변하는 '민주
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시각에 있어서 한국의 미군기지는 미국의 한반도 식민체제와 동북아 패권구도의 담보이자 민족통합의 장애이다.

미국의 군사적 지배는 식민지 자매체제를 유지하는 물리적 담보이자 분단체제 유지의 과간이며, 나아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담보하는 물리릭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는 한미국의 지배전략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과 한국 번혁운동의 주된 결립으로 작용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문제는 한국이 미국의 지배전략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문제이며, 이 민족을 미국의 지배전략에서 벗어나게 하는 민족주주운동의 핵이다(전국연합 2002).


IV. 정책적 합의

1. 반미운동의 평가

경제적 산업화, 사회적 다원화,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대외적 주체화의 요구에서 드러나는 한국과 필리핀의 격차는 필연적인이다. 따라서 대미의존의 구조적 유식성에도 불구하고, 반미운동의 현실적 지향과 수준에서 드러나는 양국의 차별성 또한 필연적인 것이다. 대외적으로 양국적 냉전체제의 해제와 일극적 패권체제의 부상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지만, 그 현실적 파급효과는 필리핀과 한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외적 정책수단이 전형적 차원의 온정주의적 공동이익을 위한 다자주의적 ‘동의’에서 세계적


그와 같이 한국사회의 정착된 반미운동과 그 다양한 분화현상은 구조적 기반이 결여된 사회적 ‘이면’이 아니라 경제적 산업화, 사회적 다원화, 정치적 민주화, 국제적 탈냉전 등 일정한 역사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구조적 ‘진화’의 소산이다. 그것이 민족적 ‘자살’인가 ‘부재’인가는 접근시각의 문제이다. 그 점에 있어서 반미운동에 대한 일방적 의존이나 전면적 거부라는 단선적이며 정태적인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적 시각을 유연하게 결합하는 중층적이며 역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관리전략은 한미동맹에 의존하여 남북협력과 지역협력을

그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공론도 최근 상당히 성숙하는 경향인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경제지원은 지지 26.5% 및 반대 67.4%로서 성별, 세대, 학력, 직업, 지역에 따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며, 심지어 ‘진보적’ 국민의 경우에도 반대가 55.1%로서 찬성 39%를 압도한다. 동일 이후 국가의 경제체제에 대해서도 자유시장경제가 68.8%, 자유시장경제적 사회주의경제는 무관하다는 경우가 20.5%로서 성별, 세대, 학력, 직업, 지역에 따른 차이가 별로 크지 않고, ‘진보적’ 성향의 경우에도 전자가 64.1%, 후자가 25.8%로서 ‘보수적’ 성향의 경우와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한국갤럽 2003). 따라서 무조건적 한미동맹이나 무조건적 ‘민족공조’의 양극적 대안을 지양하고, 현실적 상황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한미동맹, 지역협력, 남북협력의 다양한 결합을 통하여 한미동맹이나 ‘민족공조’ 어느 하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초래할 전략적 타율성을 최소화하는 대신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2. 한미동맹의 관리

대내적으로 ‘국가 속의 국가’로서 사회통합을 지하하는 반란집단의 위협에 직면하는 필리핀의 위기의식과 ‘국가 밖의 국가’로서 국가안보를 교란하는 북한정권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국의 위기의식 사이에는
현재한 격차가 존재한다. 대외적으로 주변강국의 세력균형에 시달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과 ‘원격제국’의 세계패권에 의존하는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상은 심대한 차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대미동맹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필리핀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차별성은 유사성을 약도한다. 요컨대 필리핀의 대미동맹에 대한 일방적 의존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은 민족적 분단과 통합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필요조건인지는 하더라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필리핀의 대미동맹에 대한 일방적 의존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국가안보, 민족통합, 지역협력 등 복합적 과제에 대응하는 중층적이고 역동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악화되는 미국과 북한의 갈등과 그에 따라 심화되는 한국의 전략적 곤경을 타개함에 있어서, 반미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일면적이고 정체적인 한계를 탈피하여 국가안보와 민족통합에 대한 한미동맹의 ‘이중성’이 주목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남쪽 주민을 붉게 삐고 있는 북한의 강경정책이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지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 부시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야기했음도 잊지 않는다. 이제 한미동맹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조건이자 한반도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변화하는 세계정세, 동북아정세, 남북관계에서 한미동맹은 이중적 성격 때문에 도전 받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한미관계가 요구되는 것이다(박순성 2003: 3).

그와 같이 새로운 한미관계에서 중속적이며 일방적인 관계는 자주적이며 상호적인 관계로 지속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서 한미동맹의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냉전의 종식에 따른 세계체제의 재편,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역질서의 조정, 북한의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전환 등은 국가안보와 민족통합에 있어서 한
미동맹 또는 ‘민족공조’에만 의존하는 일면적이고 정태적인 전략 대신
한미동맹, ‘민족공조’, 지역협력 등 다양한 차원이 적절하게 결합되는 중
층적이고 역동적인 전략이 요청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전략적 전환
의 핵심적 고리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배적인 북한의 변화인바, 그 점
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현실적으로 급진적 폐지를 아니라 점진적 조정
의 대상이다. 일반적 ‘민족공조’나 일반적 ‘외세공조’는 한반도의 복합적
현실에 대한 적실성이 결여된 전략적 접근으로서 한국사회의 안정을
교란하고 남북관계의 혼란을 증폭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6자회담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실종하는 중국의 전략적 전환과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을 한반도의 전쟁역지를 위한 ‘방어군’에서 동
북아의 지역안보를 위한 ‘지역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시적 구상이
시사하는 미국의 전략적 전환이 모두 중요하다(Medeiros and Fravel 2003;
Pomfret 2003; 黃曉峰 2003). 아직 기획단계에 있는 미국의 구상과는 대조적
적으로 중국의 구상은 이미 집행단계에 있는바, 세계적으로나 지역적
으로 국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국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적 전환은 민족적 분단 및 통합의 평화적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적 세계질서 및 지역질서의 피해자
로서 국가주권에 점착하는 종전의 일방주의와 양자주의를 지양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도자로서 지역주의와 다자주
의를 추구하는 중국의 전략적 전환은 각별한 고려가 필요하다(王逸舟 外
2001). 한국과 중국의 국가이익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중요한 시금석인 것이다(홍순영 2003; 沈載如
2003).

요컨대 한미동맹의 관리에 있어서 한국은 그 전략적 타율성의 최소
화와 전략적 자율성의 최대화라는 역사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주한
미군을 한반도의 ‘방어군’에서 동북아의 ‘지역군’으로 재편하려는 미국

V. 결론

일본의 폐전에 따라 필리핀과 한반도에 진주하는 미국의 폐권적 위상과 역할은 거의 필연적으로 그에 대한 수용과 거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초래한다. 그러나 반미운동이 부상하여 강화되고 약화되는 정치변동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필리핀과 한국은 일정한 유지성과 더불어 다양한 차별성을 드러낸다. 필리핀의 경우 반미운동이 상대적으로 초기에 부상하여 확산되고 약화되는 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반미운동의 동정과 성장이 지연된다. 그러한 차별성은 다양한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국제적 요인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과 한국의 반미운동은 ‘신화적’ 미국남로의 해체와 ‘역사적’ 미국남로의 재구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유사성을 드러낸다. ‘타자’에 대한 시각의 전환은 ‘자아’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필리핀과 한국에 있어서 1970년대 냉전체제의 균열에 따른 국가의 보수적 ‘주체남로’와 1980년대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른 사회의 진보적
‘주체담론’ 사이에 존재하는 ‘혈연’은 반미운동의 일정한 정당성을 대변한다.


북핵문제의 ‘난국(turbulence)’에서 부상한 ‘민족공조’와 ‘외세공조’라는 전략적 대안을 중심으로 중폭되는 한국사회의 반미담론은 민족적 분단 및 통합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거시적 맥락을 통하여 조명되어야 한다. 그것은 대외적 냉전충돌과 대내적 정치발전의 귀결이라는 점에서 필리핀과의 일정한 유사성을 드러내는 반면,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상과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소산이라는 점에서의 필리핀과의 다양한 차별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반미운동은 필리핀의 경우에 비하여 철저 다입적이고 중층적이며 역동적인 접근사각과 관리전략을 요구한다. 무조건적 ‘외세공조’는 현실적으
로 상호적 한미동맹이 아니라 일방적 '대미동조'로 귀결되고, 무조건적 '민족공조'는 현실적으로 상호적 '남북공조'가 아니라 일방적 '대북동조'로 귀착될 것이다. 그러한 양극적 대안은 모두 대외적 환경과 대내적 조건의 가속적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라고 할 수 없는바, 한미동맹, 남북협력, 지역협력 등 다양한 전략적 대안이 참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반미주의, 필리핀, 한국, 민족공조, 외세공조

참고문헌


Abstract

Anti-Americanism in the Philippines and Korea: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Sa-Myung Par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olitical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ism toward democracy offered similar objective conditions for the rise and spread of anti-Americanism in the Philippines and Korea. However, the chronic economic stagnation of the former and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the latter provided different subjective conditions for the intensity and durability of anti-Americanism. As the dynamic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has led to the reorientation and redefini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and interest of Korea, its anti-Americanism is far more likely to endure. The social discourse in Korea polarized into the two extremes of ‘extra-national (ROK-USA) collaboration’ and ‘intra-national (North-South) collaboration’ should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aceful management of national division and unification. While unconditional ‘extra-national collaboration’ will result in unilateral dependence on the USA instead of mutual interdependence, unconditional ‘intra-national collaboration’ in unilateral dependence on the North instead of reciprocal solidarity. In this transitional stage, thus, a creative combination of diverse strategic alternatives such as international coordination, regional
cooperation, and national collaboration is essential for the North Korean question.

Key words: anti-Americanism, Korea, Philippines, extra-national collaboration, intra-national collaboration.